2024년 4호
2024.12.11.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 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위해 금속노조가 나선다

윤석열은 내란 범죄자. 12월 3일 밤 10시2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 방송을 보고 놀란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회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고 저항했다. 긴급히 소집된 국회는 190명 참석 19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죄다. 윤석열 눈에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통치대상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자신과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 ※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의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며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국민의힘 105명은 내란 부역자.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탄핵찬성 73.6%로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들이 서울 국회앞에만 100만이 넘게 모였고 전국 각지에서도 탄핵 촛불을 치켜들었다.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표를 몰아 부결시켰고 탄핵소추안은 집단퇴장으로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내일, 모레, 1년후에 국민들은 달라진다. 박근혜때도 탄핵 반대해 욕먹었지만 그 다음 무소속 나갔어도 다 찍어줬다” 며 촛불을 든 국민들을 조롱했다.

책임총리제, 법적근거 없는 권력유지 꼼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놔두고 책임총리제 운운하며 자신들이 윤석열 대신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고 나섰다. 어떤 특정 정치집단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위법적, 초법적인 행위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마치 개인의 것인 양 자신이 통치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개인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내란 행위를 합리화하고 책임총리제 운운하며 대체 권력 장악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싹 다 정리" 할 대상은 바로 너희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정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다 정리해버려" 라고 말한 것이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할 대상은 바로 내란범 윤석열과 그에 부역한 수구 보수세력들이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친일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죄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등 친일 부역자들이 권력을 잡았다. 친일 부역자들이 헐값에 차지한 기업은 현재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형성된 수구 보수세력이 지금 국민의 힘의 뿌리다. 그래서 윤석열 한사람 퇴진만이 아닌 내란에 동조한 보수 부역자들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역사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부터 지금까지 수십만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100만이 넘게 모였다. 촛불집회 양상도 달라졌다. 집회장 분위기는 MZ 세대들이 주도한다. 계엄선포에 대한 분노를 기존 세대들이 비장함으로 맞섰다면 MZ세대들은 생기발랄함으로 분노를 희망의 에너지로 승화해 낸다. "촛불은 금방 꺼진다"는 조롱에 맞서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K-팝에 맞춰 떼창을 부르며 윤석열 퇴진 구호를 결합한다.

퇴진 넘어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윤석열 퇴진이 끝이 아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노동중심 민주주의 체제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6년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러나 촛불투쟁의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갔고 촛불을 통해 분출된 개혁과제와 요구들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이 계엄이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이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금속노조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무기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지침에 따라 12월 5일, 12월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고 지역별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전국에 7만여명이 참여해 불법계엄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이날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전북 기광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들이 기계를 멈췄다.

촛불 맨 앞에 금속노조가 선다.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힘 집단퇴장으로 무산되는 것을 본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고 퇴진 촛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금속노조도 더욱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해 12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석열퇴진,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나아가 금속노조는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노동의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동중심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거부권 법안 재상정과 통과 △노조 회계공시 등 반 노조악법 원상회복 투쟁 △헌재판결 전 긴급한 노동개혁법안 입법화 투쟁의 계획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은 현 정세에 대한 비상한 각오로 의지와 결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 연대의 구심이 되자. 금속노조가 금속노조답게 사업장 의제를 넘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자